# '통장 로비'… 통장·카드 통째 건넸다

## 제이유 정치인 로비 신종 수법 정황 포착
## 대여금·수당 지급·내부 정보 등 속속 확인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능적이고 교묘한 로비 수법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대여금 제공 ▲과도한 수당 지급 ▲내부 정보를 알려줘 주식의 시세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 등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통장과 현금카드를 통째로 건네는 이른바 '통장 로비' 정확도 새로 포착했다. '통장 로비'는 거액이 든 차명 통장을 로비 대상자에게 현금카드와 함께 전달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도록 하는 신종 수법이다.

검찰은 주씨의 전 여비서 김모(42·여)씨 명의의 차명통장 4개 중 1개에서 8천만~9천만원이 2004년 2~3개월에 걸쳐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의 현금인출기에서 집중적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이 있었던 2004년 여의도 등에서 차명통장의 잔고가 빌 때까지 돈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간 점으로 미뤄볼 때 유력 정치인이 통장을 건네받아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 제공은 상위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는 수법이다. 실제로 제이유가 168억원의 자금을 상위사업자 110명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이 돈이 정치권 인사나 고위 공직자 가족을 포섭하는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주씨 자신이 71억원을 본인 명의로 빌린 사실이 드러난 데다 이 중 상당액이 284억원의 횡령금액에 포함돼 있어 미상환 대여금을 로비에 활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 가족을 회원으로 끌어 들여 일반 회원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해 간접 로비를 벌이는 방법도 눈길을 끈다.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 6명이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일반 회원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됐다. 이 비서관 가족은 13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11억8천만원의 수당을 받아 보통 투자금의 30%도 못 건지는 일반 회원들과 비교하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로비 방식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해 주가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주씨의 최측근 한의상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승호 총경은 제이유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관련 주식을 집중 매입, 3개월만에 11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FTA 5차 협상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이 지난 9일 오전 협상장인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 근처에서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FTA 6차 협상 내년 1월 15일부터 한국서

# 농산물·섬유 격돌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내년 1월 15일부터 한국에서 열린다.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지난 4일(현지시각)부터 8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5차 협상의 최대 쟁점이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였다면 6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농산물과 섬유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측이 산업관정 피해시 한국산 분리적용 등 반덤핑 절차 개선과 관련된 우리측의 5가지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느냐가 일단 한미FTA 전체 협상의 가장 큰 변수다.

현 시점에서 미측이 협상을 파국으로 모는 '완전 거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극히 낮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미 의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측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일부 수용할 여지를 시사했다.

결국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수준에 맞춰 6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과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보험약가 결정과정 참여폭 결정 등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의 양보안을 미측에 제시하고 미측은 자신들의 요구인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의 진전 수준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른바 핵심 쟁점 분야에서 주고받기식 '빅딜'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6차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섬유 분야가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일단 섬유의 경우 5차 때부터 대표급이 차관보로 격상돼 회의를 진행중이다. 또 양측은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입장을 5차 협상에서 충분히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6차 협상에서 우리의 수정 양허안(개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 동해 표류 북한군 2명 구조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소형 무동력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군 2명이 우리 해군에 의해 구조됐다.

정부 소식통은 "9일 오후 11시께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이 3t급 무동력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우리 해군에 발견돼 관계기관에 인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인근 해역을 정찰중이던 우리 해군의 대잠초계기(P3-C)에 의해 발견됐으며 남루한 군복으로 추정되는 감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며 이중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발견된 직후 국군 강릉병원에 보내져 1차 진료를 받았으며 10일 새벽 다른 군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귀순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표류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인턴보좌관제 서두르면 毒

정후식 정치부 차장

지난 8일 오후 1시40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피켓을 든 채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시민단체들이 특정 사안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시의회 본회의를 저지하고 나선 것은 광주시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무엇이 이들을 '육탄 저지'라는 초강수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발단은 지난 4일 광주시의회가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 없던 1억7천600만원의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유급 보좌관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질 향상 노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 노력부터 보여달라는 요구였다.

광주시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 초기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권력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의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남도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결위에서 의원당 1명씩 50명(의장은 제외)의 보좌관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 5억4천여만원을 수정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며 집행부인 전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인턴보좌관제는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기능 강화방안'이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추진 과정은 사뭇 다르다. 광주·전남에 비해 재정여건이 훨씬 나은 대구시의회 등은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재정 상태 및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도입을 유보키로 한 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쇠뿔도 단 김에 빼겠다'는 듯 수조원대의 예산심의권을 무기로 되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철저한 예산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야할 책무를 지닌 의원들이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날치기'니 '후진정치 답습'이니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원들의 주장처럼 이 제도가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더욱이 혈세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어떤 시도도 해본 적이 없다.

행정자치부가 '불법'이라며 반대하는 제도를 입법기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도입한다면 그 화살은 다시 의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 경고를 엄포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who@kwangju.co.kr